

Thematic Radar

Ep. 26 7월 남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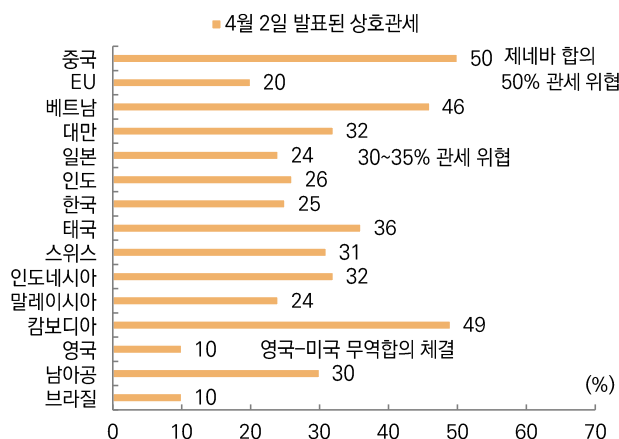
- 오는 9일에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 주요국들과의 협상 속도 더딘 상황
- 상호관세 유지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무역 정책 불확실성 재차 높아지며 지수에 약세 압력 부과
- 일본, EU, 인도와의 무역 합의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한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7/9)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90일의 유예 기간동안 무역 합의가 된 주요국은 영국뿐이라는 점이다. 영국과 같이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던 일본, 인도와는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대선의 영향으로 협상 진도가 상대적으로 늦다. Fast-Track 진행을 약속한 EU와도 의견차가 아직 남아 있다. 주요국들과의 협상 속도를 감안하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EU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보다 빠른 협상 속도를 약속받은 것처럼 다른 주요국들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적용해 자극을 주는 시나리오다. 인플레이션을 신경쓰는 미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상호관세가 유지되는 기간은 길지 않겠지만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재차 높아질 전망이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며 주식 시장에도 약세 압력이 부과될 수 있다.

7월 9일 전까지 합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국 수출 중 약 34%가 자동차 및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향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태다. 자동차 관세 인하는 EU도 원하는 부분이다. EU 집행위에는 최근 보편적 10% 관세를 용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대신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 핵심 섹터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요구 중이다. 미국이 EU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이고, 자동차는 EU의 핵심국인 독일의 주력 산업인 만큼, 자동차 관세 인하는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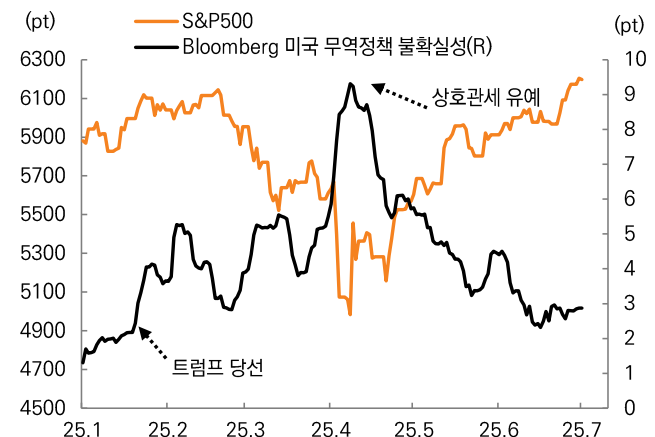
인도와의 합의에서는 농수산물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에도 소고기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산 수입 증진을 요구했듯이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인도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핵심 유권층을 차지하는 소규모 자작농들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원하는 전면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GMO 농산물이 인도내에서는 금지된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그림 1. 7/9일 국가별 예상 상호관세율



자료: The White Hou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S&P500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